

## 향후 고용 · 노동 정책 과제와 해법 모색

김 승 택\*

최근 디지털화에 따른 기술변화의 가속과 산업구조 재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산체계의 변화, ESG경영을 위시하여 사회적 기여가 중시되는 기업 생태계의 변화, MZ세대의 노동시장 비중 확대에 의한 근로문화의 변혁 등 산업과 노동시장 모두에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기술과 산업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빠른 변화에 익숙한 상태지만 이번에 직면한 큰 변화는 한 단계 높은 도전과제를 던진다. 특히 상품시장의 변화보다 느리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법제도, 사회안전망, 관련 정책 기조와 지원프로그램에 걸쳐 폭넓은 대처가 필요하다.

전 세계를 직격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다자간 무역 질서에 익숙해진 무역 국가들에 필수적인 공급체인이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을 드러냈고,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하여, 앞으로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이전의 다자간 무역협정에 따른 체계에서 필수재와 핵심기술의 확보를 우선시하는 블록경제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행동양식이 바뀌는 추세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자동화가 가속화되어 고용-기술의 대체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성장의 큰 부분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는 업종의 매출 회복 및 확대가 단기적으로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과 함께 국제경제가 침체를 맞이한다면 우리나라 또한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새 정부는 경기침체기의 일자리 창출 촉진과 고용안전망 정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기침체에 기업은 높은 성장보다 내실을 다지는 유지전략을 지향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투자를 통한 신산업의 발전이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인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 한편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실업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견뎌 나갈 수 있는 고용안전망의 정비 및 확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은 경기침체기에는 실직자나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과 자영업자의 형편 또한 어렵기 때문

\*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stkim@kli.re.kr).

에 고용안전망의 사용자 기여분이나 노동비용의 상승이 과도한 경우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침체기에는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고용안전망을 확대해야 하는 조화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 노동시장은 여전히 일자리의 양을 확대하고 질적인 부분을 향상해야 하는 해묵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노동법과 안전망의 정비,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등 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스러운 지점까지 도착하지 못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만, 고용노동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이 각각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되면서 상호보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 또한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미 현실에 반영되고 있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대전환과 세계적 경기침체의 위험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고용·노동 과제마다 직면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는 정책조합의 수정·보완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노사정의 협력이 중요하다.

『노동리뷰』 이번 호에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고용·노동 이슈에 대한 개관을 통해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우선 해결해야 하는 정책과제를 다루었다. 고용정책 부문은 당면한 인구구조의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노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의 속도가 빨라질 때 노동시장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노동력과 사회보장 자원뿐 아니라 더 나아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극복하려면 출산율의 회복을 통해 인구가 성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답이겠으나, 단기 및 중기에는 아직도 취업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고령층, 여성, 청년층의 고용률을 상승시키는 방안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정책 부문에서는 플랫폼 노동 같은 비정형적이고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과 확산을 포괄하는 노동법과 사회보장 제도의 개편,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고용보험제도 중심의 고용안전망의 결함 보완 문제, 새로운 형태의 고용까지 포괄하는 노동법 적용 범위 확장 등의 해법을 찾아본다. 노사관계 부문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수준 향상, 임금격차의 확대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방안, 변화하는 사회와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노사관계 구조에서 필요한 변화 등을 제시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그동안 여러 전문가가 위의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를 해 왔으며, 올바른 정책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공론화하는 데 노력했다. 이번 『노동리뷰』는 새 정부의 출범을 맞이하여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중장기에 걸쳐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에 대한 중장기 정책 방향의 제시와 함께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내용을 구성했다. 부디 이 내용이 향후 추진될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와 함께 경제사회 및 노동시장이 맞은 큰 변화의 시대에 적절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촉매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KLI**